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A에 따르면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이므로 (가) 은/는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그렇다면, (나) 은/는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교사: A에 따르면 정치로 볼 수 없지만 B에 따르면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B에 따르면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③ A와 달리 B는 정치가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가)에는 '국무 회의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없다.
- ⑤ (나)에는 '학생회에서 축제 공연 순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률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다면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A는 과거 독일의 수권법 사례와 같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A의 한계로 인해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과 목적까지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였다.

- ① A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 ② B는 통치의 절차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 ③ A와 달리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A, B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생계 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A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 국가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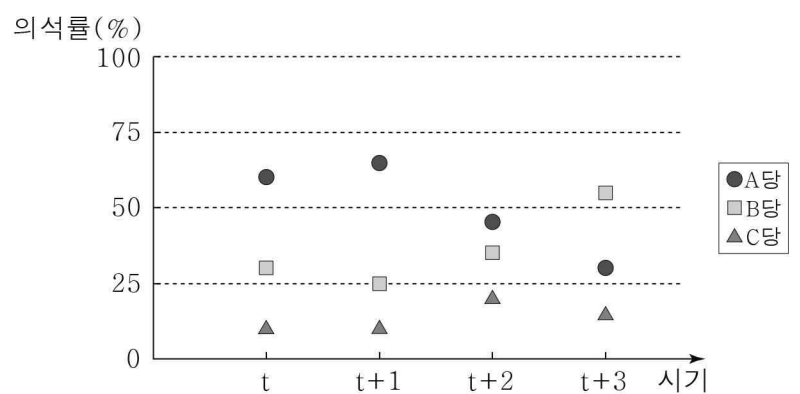
A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B는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는데, 그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을 가진다.
- ② B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③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A와 B 간에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가 나타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 t+3 시기 중 정부 형태는 2회 변경되었으며, t 시기 행정부 수반은 C당 소속이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와 같고, t+3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와 같다. 다음 그래프는 시기별 각 정당의 의석률을 나타낸다.



* 갑국에는 A ~ C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음.

** 의원 내각제인 경우, 각 시기에 최초 구성된 내각은 해당 시기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보기 >

- ㄱ.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여당 의석수가 야당보다 많으면,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 ㄴ. t 시기와 t+2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1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 ㄷ. t+1 시기와 t+2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1 시기, t+2 시기 모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ㄹ. t 시기, t+3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공배달앱 운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가 ㉠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시의 □□ 단체는 공공배달앱의 도입을 요구하며 ㉡ 누리 소통망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시에서 공공배달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서 ㉣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 보기 >

- ㄱ. ㉠은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한다.
- ㄴ. ㉡과 같은 정치 참여 방법은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 ㄷ.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ㄹ.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정 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갑은 을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을이 갑의 친족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갑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 법원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이후 법원은 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갑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A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B에 재항고하였다. A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C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그동안 대부분의 친족 간 재산 범죄 사안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해당 조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사법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7. 위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ㄱ. ㉠은 갑의 제청 신청 없이 A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 ㄴ.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필요로 한다.
- ㄷ.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는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 ㄹ. A는 심판 대상 조항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 유형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B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 ② A는 C의 제소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 ③ A의 재판관은 C의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B의 장(長)은 A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⑤ B의 장(長)은 C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현실주의, 자유주의 중 하나임.) [3점]

1990년 갑국의 침공으로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에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이 참전하였다. 다국적군으로 참전한 을국은 또 다른 국가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갑국 지도자를 축출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쟁에서 갑국은 ㉠ 제네바 협약에 따른 인도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사

국제 연합이 평화 저해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무력 사용에 관한 결의를 채택해 다국적군이 참전하도록 한 것은 A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을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 내 또 다른 국가의 세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갑국 지도자를 축출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B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 ② A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③ B는 국가 간 권력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④ A와 달리 B는 국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⑤ A, B 모두 국제 사회에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A, B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A 또는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 갑은 캠핑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폭발의 위험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법원은 당시 생명과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였고, 갑의 음주 운전이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A가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을은 차량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법원은 사고 당시 을이 지병에 의한 발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B가 조각되어 을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법원은 을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절도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 ④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⑤ 현행범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11. 다음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의 △△조항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구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은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형벌 체계상 정당한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①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 ③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④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쇼핑몰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고가의 신발을 구매하는 계약을 을(38세)과 체결하였다. 다음 날 갑은 생일을 맞아 삼촌 병(35세)과 영화를 보고 병에게 선물로 영화 캐릭터 피규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받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은 정(25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자신의 용돈으로 구매하였다. 일주일 후 을과 정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갑의 법정 대리인 무는 갑이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해 알게 되었다.

- ① 갑과 을의 매매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에게 있다.
- ②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무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갑과의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무는 갑과 병의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갑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3.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게임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이 지나면 이용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용자 갑은 이용 기간 종료 후 게임 아이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의 이용 기간은 상품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A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①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는 원칙이다.
- ② 소유권 행사 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A에 따르면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 ④ A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⑤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 오염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은 A에 근거한다.

14.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수차례 물건을 공급받으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 구속된 갑은 ㉡ 기소되었고, 법원은 갑에게 ㉢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① ㉠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 ③ ㉢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나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 ④ 갑에게는 ㉣ 계속 중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이 확정되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4명, 비례 대표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갑국은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는 유지하며, 차기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 방식만 변경하는 개편안 <1안>, <2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 <1안>은 선거구 1과 선거구 2, 선거구 3과 선거구 4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2개로 축소한다. <2안>은 선거구 1과 선거구 3, 선거구 2와 선거구 4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2개로 축소한다.
○ <1안>, <2안> 모두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동일하며, 득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음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선거구 1, 선거구 2, 선거구 3, 선거구 4의 유권자 수의 비는 3:2:2:3이다. 개편안 적용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 1	20%	10%	40%	30%
	선거구 2	25%	5%	50%	20%
	선거구 3	30%	5%	40%	25%
	선거구 4	30%	40%	20%	10%
정당 투표 득표율		30%	5%	40%	25%

* 정당은 A ~ 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현행과 개편안 모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을 공천함.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보기 >

- ㄱ.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없다.
- ㄴ. <1안> 적용 시와 <2안> 적용 시 각각에서 선거구별 유권자 수는 동일하다.
- ㄷ. <1안>, <2안>과 달리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ㄹ. 각 정당이 <1안> 적용 시 확보하는 총의석수와 <2안> 적용 시 확보하는 총의석수는 같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A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B는 해당 정책안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C는 개발을 통한 건설 경기 부양을 이유로 찬성하였다.

- ① A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 ② B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 ③ C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C와 달리 A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 ⑤ A, C와 달리 B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은 국제 연합의 회원국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A의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가입 절차가 중단되자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B에서는 A가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인 C는 ○○국에 대한 □□국의 장기간 점령, 정착 정책 등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 ① A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에 대하여만 거부권을 가진다.
- ② C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⑤ A와 달리 B는 C를 구성하는 15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권한을 가진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B는 해당 건물에서 빵집을 운영하였다. B는 케이크 대량 주문을 받아 운송업자 C와 배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의 직원 D는 차량에 케이크를 실어 배송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행인 E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약속된 시간에 케이크가 배송되지 못하였다. 한편, B가 임차해 사용하던 A 소유의 건물 외벽이 노후되어 간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F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차량에 있던 F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① D는 B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C의 E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D는 E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C는 D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E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A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F에 대해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F는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배상받을 수 없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갑이 혼인 기간 중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을과의 상의 없이 병에게 빌려 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갑과 을 사이의 자녀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행사하게 되었다. 이후 갑은 정과 혼인 신고를 하고, 정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B와 함께 지냈다. 한편, 을은 무와 법률상 혼인을 하고 둘 사이에서 C가 태어났으며, A가 19세가 되었을 때 무는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자로 입양하였다. 몇 년 뒤 갑과 정은 B에 대한 입양 절차를 상담하고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 사고로 모두 유언 없이 사망하였는데, 갑이 정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 ① 갑과 을의 혼인 기간 중, 을은 갑이 병에게 진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없다.
- ②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무가 A를 입양함에 따라 을과 무는 원칙적으로 A에 대한 친권을 함께 행사하게 된다.
- ④ A가 양자로 입양된 때에 갑과 A는 친족이 아니지만, A와 C는 친족이다.
- ⑤ 갑의 사망 시 정과 A는 갑의 상속인이 되고, 정이 사망 시 B는 정 상속인이 된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8세)과 을(17세)은 상시 근로자 20명이 고용된 ○○ 행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장 병과 다음과 같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 근로에 대한 별도의 합의 사항은 없었다.

○ 계약 기간: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소정 근로 시간: 10:00 ~ 19:00 (휴게 시간: 12:30 ~ 13:30)
○ 근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 임금: 법정 최저 임금(시간급)
○ 담당 업무: 행사 진행 보조 및 연회장 서빙

계약 기간 종료 후 갑만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연장하여 일하던 중 갑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병은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① 병은 갑과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갑과 을의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을과 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 ③ 갑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할 경우, 갑의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병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④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⑤ 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